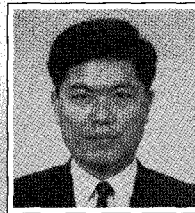


어업인과 정부가 함께하는 자율관리어업



김태기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사무관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화된 규정을 제도권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자원조성과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을 다른 정책과 비교해 보면 3, 4년 동안 정말 놀랍게 발전한 것으로 이 정도 성공이라면 국민, 공무원 모두 예산을 편성할 때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일 것입니다. “국가의 되고 작은 이익은 모두 상대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문제를 투쟁만으로 풀 수 없으므로 자율관리어업처럼 자율조정,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어업 근절없이 수산의 미래는 없으므로 불법어업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업인들도 적극 대처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살길을 찾아가는 성공적인 자율관리어업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통영시 마리나리조트에서 500여명의 어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린 장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여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언급한 부분이다.

자율관리어업이 우리부에서 처음 논의 되었던 것은 1997년부터이다. 이 자율관리어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4년여가 흘러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관리로

효율적인 자원보호와 적정생산에 의한 적정 어가 유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한 TAC제도의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시작 당시에는 63개소의 공동체가 참여하였는데 현재는 174개소로 늘어났으니 자율관리어업이 기반조성 단계를 거쳐 확산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해 온 자율관리어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기로 하겠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성과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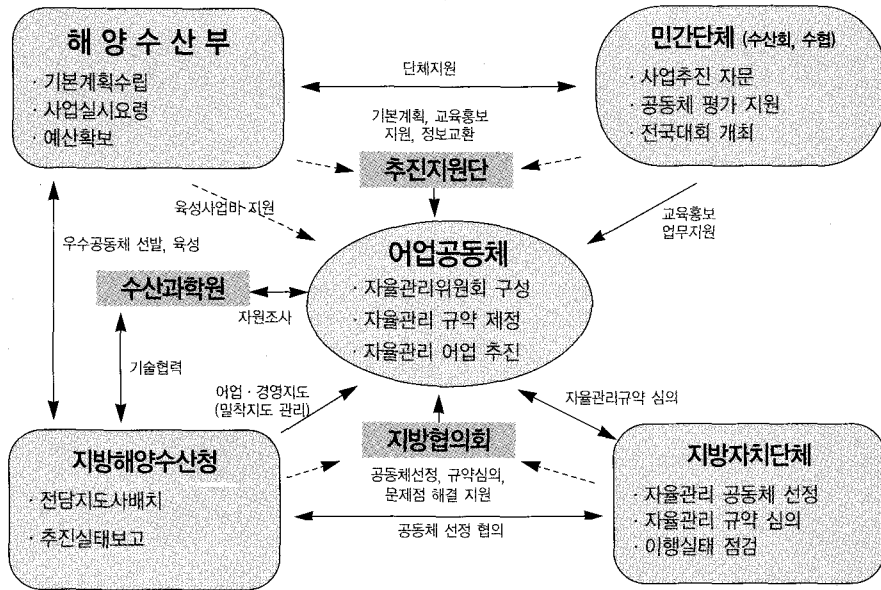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

먼저 정부의 강제가 아닌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장관리, 자원관리, 생산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을 제시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업인, 민간전문가, 수산과학원, 학계, 공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참여 공동체 현황(2004 현재)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4	5	9	5	6	16	13	10	53	23	19	15
마을	59	1	2	2	1	11			23		5	14
마을, 양식	33			1	3	1	2		7	18	1	
양식	26	2			1		1	5	11	1	5	
어선	36	1		2	1	3	5	5	8	4	6	1
어선, 마을	13	1	7			1	3		1			
어선, 마을, 양식	1						1					
어선 양식	4						1		3			
구획	1										1	
면허	1										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원으로 구성된 중앙단위의 추진지원단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관리 추진상의 문제점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 참여유도와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육성사업비를 2002년부터 308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액은 최우수 10억원, 우수 5억원, 장려 1억원 또는 2억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공동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자율관리어업 추진 성과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성과 중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어업의 감소라고 생각한다. 즉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불법어업에 대하여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감시선·감시조를

운영하고 불법고발센타를 운영하며, 불법시설물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못해 법규를 준수하는 수동적인 수산자원의 보호에서 종묘방류, 채포후 치어 재방류, 어장 휴식년제 실시와 같은 능동적인 자원조성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업금지 기간이나 채포금지제장 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공동체 규약에 정하여 지켜 나가고 있다.

순수어업 이외 공동생산·판매에 의하여 적정생산과 관리에 의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체험어장 운영 및 어촌관광사업 개발을 통하여 어업외 소득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같은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간 또는 인근 어촌계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례로서 권원망과 정치망 어업인간 자율관리협약서를 체결하여 조업규제 구역을 설정하여 상호 준수해 나가고, 선망·통발·저인망 어업인과 연안어업

인간 조업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유자망과 통발어업인은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어구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공동체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를 어촌계 양식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어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면 어선어업 유형의 공동체 중 이동성이 큰 어종을 어획하는 경우 조업구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관리어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비참여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업수역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거나 내부갈등이 있는 공동체는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갈등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지원만 기대하고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중도에서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인들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주인의식과 자조·자립심을 함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조업질서를 재편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추진으로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근절해나갈 것이며,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공동체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내부 또는 공동체간 갈등 및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수산회에 설치한 '자율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분쟁해소 기법을 제공하고, 분쟁해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중심으로 실시가 용이한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을 위주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어선어업 공동체 위주로 확대해 나가고, 최근 구성된 자율어업공동체 지도자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지도자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어업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조업 어선 및 시설에 대한 단속과 면세유류의 사용 확인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계도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명예감시선'을 400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불법어업 없는 마을'을 10개소이상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동체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 발굴 평가하여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화된 규정을 제도권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자원조성과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공동체에는 어촌관광사업과 체험마을 등 다른 수산사업도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청, 수산과학원과 수협 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자율관리어업 정착 및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교육은 우수공동체 현장 견학을 통하여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수공동체 지도자의 순회 교육을 통하여 성공사례의 전달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기 개발된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시 온라인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에 자율관리어업의 분위기가 확산 전파되어 정착되면 만(灣) 또는 시군 단위로 공동체는 광역화 될 것이며, 2,000개소의 전체 공동체까지 참여하게 되어 민간단체가 이끌어 가는 체제로 완전히 정착될 것이다.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

원할 것이다. 2004년까지 178개소에 대하여 30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72개소에 104억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8일, 29일 양일간 대통령,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사례발표 및 우수 공동체 표창, 불법어업 추방을 결의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지도와 사후관리를 해나가며, 민간단체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추진가능사업

분 야	가 능 사 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입수축양수조, 산지간이위판장, 어장 진입로
어장환경개선 시설 및 사업	쓰레기 적치장, 쓰레기 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폐각분쇄 처리장, 노후어장 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자원조성 시설 및 사업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소장 조성
자율관리 의식향상 사업	기타 자원보호와 관련된 체험어장 및 낚시터 조성